

# “새만금 카지노, 잃는 것이 더 많다”

### 새누리 정운천 의원 “새만금은 크게 봐야... 기업이 관심분야 찾아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해야”

국회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은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는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11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전북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카지노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은 크게 봐야 한다. 카지노 보다는 전 세계인이 만나는 박람회장 등을 건설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또 그

다음에 레저, 호텔 카지노 등이 거론돼야 한다”면서 “새만금에 바로 카지노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부분적인 면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찾아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특히 국가에 공헌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 개발이 어렵다고 카지노를 들어왔다는 것은 도움될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카지노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은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서남대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절대 안된다”면서 “서남대 의대 존립 자체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우리 자신들이 반성해야만 한다”고 되짚었다.

이정현 당 대표 등 전남권 이전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순천 의대와 연계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또 서남대 의대가 폐과 된다고 해도 전북 TO까지 잃을 수 없다. 꼭 지켜 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이정현 당대표와 지난 총선과정에서 ‘호남권 예산 벨트’ 구축을 통해 예산 확보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오는 23일 전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 진경준·홍만표 방지 6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태스크포스)는 11일 법조계 전문가를 위한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법’ 6개를 발의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정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임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입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입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변론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에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병계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시스

##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해야”

야당은 1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셀프 칭찬에만 열심이다.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실 어린 사과에 기반을 둔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백고 떨어지려’는 것과 다름없다. 위안부 합의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의 일본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 ‘나눔의집’을 방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이 우리 정부하고 소위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민족 자존심이, 할머니들의 생애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이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일본에서 10억엔,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마치 할머니들을 분열시키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비판하며 “화해도 치유도 안 되는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체하고 국회에서 10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 할머니들을 더 돕고 일본과도 화해하는 일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열심히 배울게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더민주 도당, 내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2부 김춘진 도당위원장 추대 선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3일 오전10시부터 전주오벨리스크웨딩홀(구,웨딩캐슬)에서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안호영·양종숙 중앙당 선거관리위원과 김상근, 이종걸, 추미애 당대표 후보와 부분별 최고위원 후보자, 중앙당 관계자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춘진 도당위원장 후보, 이춘석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 도당 소속 전국대의원과 내빈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호영·최은희 대의원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1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2부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로 나뉘어 열린다.

1부 합동연설회에는 지난 5일 예비경선을 통과한 기호1번 김상근, 기호2번 이종걸, 기호3번 추미애 당대표 후보와 노인부문 최고위원 후보에 기호1번 제정호 기호2번 송현섭, 여성부문에 기호1번 유은혜, 기호2번 양향자, 청년부문에 기호1번 장경

태, 기호2번 이동하, 기호3번 김병관 후보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2부 도당 대의원대회는 권한 위임의 건과 도당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당위원장 선출은 김춘진 현 도당위원장이 단독 임후보함에 따라 투표 없이 대의원의 추대로 확정된다.

당 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ARS투표 30%, 일반당원 여론조사 10%, 일반국민 여론조사 15%와 오는 2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 현장투표 45%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신광영 기자

## 새누리당 도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남원시·완주군 등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참석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11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와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11면>

또 이날 회의에는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김용호 남원·순창·임실 당협위원장, 신재봉 완주·진안·무주·장수 당협위원장, 허남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권당의 중앙 소통 창구가 비로소 열린 것을 환영하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자치단체별로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한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센터 건립을, 완주군은 △서부내륙권 국가공역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산세삼백 마을 조성사업과 △이서면 일대 내수업 수산물산지직접판매소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진안군은 △지리산 산림치유원 국립화와 △마이산 일원 테마관광사업 지원을, 무주군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과 △새만금 포항을 잇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장수군은 △장수-장계간 국도 19호선 개량사업과 △임실-장수간 국도 13호선 건설사업 지원을, 임실군은 △삼천강댐 육정호의 수위사업인 순환도로 개설과 △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지원을, 순창군은 △장류 등 전통식품 창조기업센터 구축과 △국도 21호선 방재터널 도로 개량사업 지원을 각

각 건의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현정사상 처음으로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낙후의 패배감을 벗고, 전북이 호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여야 구분없는 상생의 정치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며 “전북의 비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북의 자치단체장들이 먼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호 당협위원장은 “곳곳에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재봉 당협위원장도 “여야 상생의 쌍발통 정치시대가 열렸다”며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협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한다”고 전했다.

허남주 도의원은 “최근 전북 정가의 화두는 협치”라며 “협치의 성과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박 대통령 “김영란법, 해결이 필요한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김영란법과 관련,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정현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오찬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와 내수경기 악영향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는데 시행령 원안 수정 요청이 많았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하고, 시행령이 만들어 놓은 법과 완전히 달리 만들 그런 것은 아니라는 특유의 원칙을 말하시면서 더 뒷부분에 더 포인트가 있다”라며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씀했다”라고 전했다.

/뉴시스

## 더민주, 36개 법안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을 당론화하는 첫 의총”이라며 “먼저 정책위원회에서 추려서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가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 의총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주요 36개 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8개 법안은 8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내 1호 발의 법안으로 우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발의하기로 약속했던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와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하고 다중 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독립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둔다는 법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법안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별을 폐지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할당제 기준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것과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법안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다.

/뉴시스

## ‘여름철 전기요금 불만’ 고리로 정부여당 압박

야당은 11일 여름철 전기요금 문제를 고리로 삼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강화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련된 부처 책임자가 전기요금 개편 시 부자감세 우려가 있다는 어이없는 말로 국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에 왜 부자감세 논리를 들이대나. 복잡한 요금제도를 개편해서 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게 요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요즘 더민주 정책위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전화 민원이다.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결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폭염에 쪼든 서민들에게 대통령이 전기요금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국민의당은 맨 먼저 누진을 중지하라고 강조했고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어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나서줘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전기료 올라갈까 벌벌 떠는 우리 국민들,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틀지 못하는 국민들, 많은 자녀를 낳아 다가구로 어렵게 살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가구처럼 모시고 사는 절박함을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인 장병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기록적 폭염에 들어서는 국민들이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불통 주장을 되풀이한다”며 “산자위원장으로서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다음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자부와 한전에 따져물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새누리,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대책 논의기로

새누리당이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최고위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폭염이라는 이상기온도 하나의 재해다. 이것도 자연재해라고 봐야 하는데 많은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 요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라며 “전기요금을 1~5단계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펴보고 올해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 인하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 올해 7~9월까지 유난히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당장 올해에 한정해 그런 상황에 맞는 대안이 없는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후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 측 인사와 만난 것은 맞지만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